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08. 30

충남의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jhim@cni.re.kr

본 연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위한 기본적·통합적 지침을 제시하여, 충남도의 주거환경 정책방향과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함

요 약

CONTENTS

< 요 약 >

1. 지침의 개요
2.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3.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기본지침 세부 가이드라인(예시)

- 본 ‘충남의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통합(기본) 지침(안)’은 충남도의 정책방향인 과거 일자리·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도민의 행복과 일상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정책적 의지와 충남도의 주거환경 정책 추진의 기본적 방향과 중점적 추진 시책과 사업개발의 가이드라인적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적 기초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지침작성의 배경과 지침의 성격 및 의미, 목적 등을 명시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시군·주민,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 충남의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충남도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개선)
 - **[커뮤니티]** :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 공동체 기반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건강성]** :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통해 주민의 건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지원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환경성]** : 주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기반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본 지침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기본지침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충남도 주거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적 추진과제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은 이에 기초하여 창의적 정책, 시책과 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함

1. 지침 작성의 배경

-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못지않게 삶의 질과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과거 주택의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충남도 및 시군은 일자리와 경제 정책 못지 않게,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관점에서의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실천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발굴·추진이 요구된다.

※ 주거기본법 제정(2015년 6월 22일 / 2015년 12월 23일 시행) : 주거환경 관련 주요 내용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자료 : 주거기본법 내용 참조

2. 지침의 성격과 의미

- 본 지침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 주체들 간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 충남도의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색깔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본 지침은 충남도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경제 정책 못지 않게, 도민의 삶의 질과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도민행복·도민밀착형 정책 강화).

3.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충남도·시군,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일상적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부하 저감 등을 통해 현재·미래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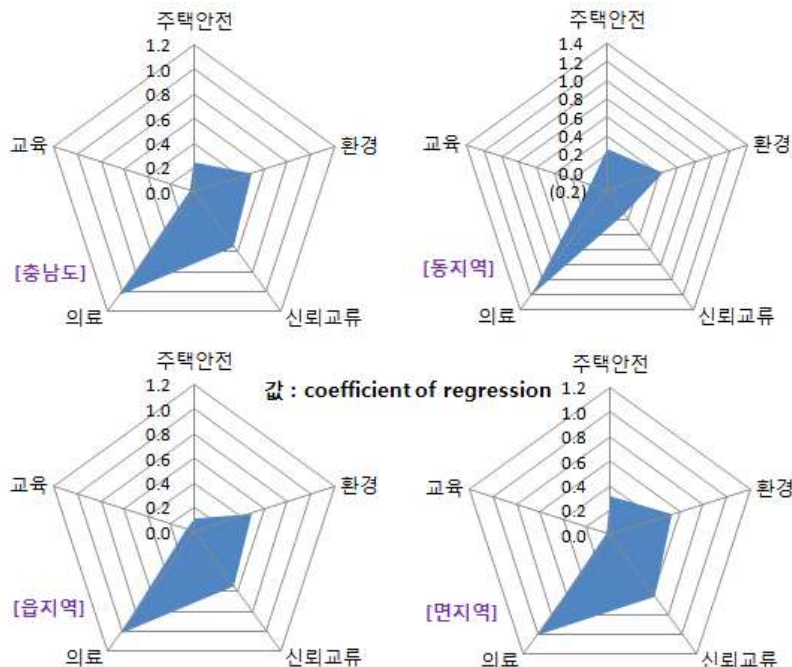
4. 각 주체들의 역할

-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 시군, 주민(도민), 사업자는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충남도] : 도민이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 실현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모범 시범사업을 발굴·확산한다.
- [시 군] : 충남도의 주거환경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에 기초하여, 시군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 [주 민] : 주민은 충남도가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충남도 및 시군의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에 적극 참여·협력한다.
- [사업자] : 사업자는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 제안 등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마을의 전통적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

02

-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커뮤니티(공동체)의식’제고, ‘건강성’강화, 일상적 생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성’제고에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을 둔다.
- [커뮤니티] :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 공동체 기반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건강성] :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통해 주민 건강성을 강화하도록 건강지원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환경성] : 주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기반시설을 정비·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료 : 임준홍·홍성효, 2015, 충남리포트 177호 참조
 < 도민행복과 주거환경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 >

양호한 주거환경 만들기 기본지침 세부 가이드라인(예시) ◀

03

6-1. 공공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편리성과 커뮤니티 강화

6-1-1. 사람중심의 보행자 우선 커뮤니티 도로 정비

- 충남도와 시군은 주거지 내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커뮤니티 도로로 정비하여, 도민 안전은 물론 주민의 소통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차 중심의 주거지 내 도로공간을 정비하여 주민이 걷기 편한 도로로 정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정비함
- 주민이 걷기 쉬운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보행시간을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강화함



<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개념 >

(<http://kodomo-anzen.org/manual/p051/p067/>)

6-1-2. 미이용·저이용토지(공터 등)의 활용과 정비

○ 충청도와 시군은 주거지 내 저이용·미이용되고 있는 공터 등을 조사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주거지 내 이용도가 낮은 공공공간 및 공터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조성함



안동 빈집 활용 소공원 조성
(www.yeongnam.com)



안동시 공터 활용 주차장 확보 사례
(www.ugn.kr)

6-1-3. 빈집의 정비

○ 충청도와 시군은 주거지의 안전과 경관에 방해되는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및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주거지 내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용(예)>

(<http://m.zum.com/news/society/4826972>)

※ 일본 니카호시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서 제시한 빈집 관리가 필요한 곳

-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자연현상 등에 의해 흐트러지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
- 해충 또는 악취 발생장소가 되는 곳
- 들개나 길고양이의 거처가 되는 곳
- 불특정자의 침입에 의해 화재 또는 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곳
- 교통상의 장애가 되는 곳
- 폐기물의 불법투기장소가 되는 곳
- 건축자재 등의 지저분하게 쌓아두거나 경관을 해치는 곳
- 전 각 호에서 언급한 것 외, 환경위생 및 양호한 환경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곳

6-2-2. 공원의 성격과 역할 재검토를 통한 공원리모델링

○ 충청도와 시군은 노후화,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건강성을 높이는 공원으로 정비한다.

- 지역민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의 성격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이용도가 낮은 공원의 역할 재정립
- 예를 들어 고령자가 많이 사는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을 건강공원으로 리모델링



의정부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www.ujbnews.net)



수원 팔달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paldal.suwon.ne.kr)

6-2-3. 안전하고 안심한 우리 마을만들기

○ 충청도와 시군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barrier free)기법이나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안전·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한다.

- 어린이 및 고령자 등 사회약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위해 베리어프리, 범죄예방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함



강남구 범죄예방디자인
(martmpa.tistory.com)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
(www.danbinews.com)

6-3.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와 생활형 공해의 저감

6-3-1. 자연환경의 보전에 협력

- 충남도와 시군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에 있어 자연환경과 동식물 보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발행위 등에 있어 자연환경과 동식물 보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민들은 자연에서 생식 또는 생육하는 동식물 및 자연환경 보호하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6-3-2.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방지 노력

- 충남도와 시군은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주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3-3.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노력

- 충남도와 시군은 친환경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주민 및 사업자는 대기의 보전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에너지 사용의 절감,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 그 외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

6-3-4. 대중교통이용의 촉진

- 충남도와 시군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보급 및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자동차 운전자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3-5. 자동차 등 소유자의 환경적 노력

- 자동차 소유·이용자는 자동차 등을 정비하고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 자동차 소유·이용자는 배출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공해전을 자제하여야 한다.

6-3-6.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 충남도와 시군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자율적 청결활동을 유도·지원하여야 한다.

- 깨끗한 충남,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시책과 운동,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예, 창원의 용강마을 주민들이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과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실천(2014년 9월))
- 충남 깨끗한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



강서구 화곡2동
(www.gangseo.seoul.kr)



광진구 화양동 쓰레기 제로화 사업
주민설명회(www.sgilbo.kr)

6-3-7.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

○ 충남도와 시군은 주거지에 영향을 주는 악취유발 업체의 입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접 마을의 악취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 ※ “악취 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 국 가 :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 지자체 :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 국 민 :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자료 ; 악취방지법 참조 재정리

6-3-8. 수질 오염방지 및 친수공간 정비

- 충청도와 시군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질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및 주거지 내에 위치한 도랑에 대해 주민주도의 정비를 유도·지원하여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는 사업 및 생활 폐수처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충청도와 일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개천 사업의 확대 추진(예, 아산시의 특화사업인 주민주도형 실개천 가꾸기 사업이 올해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하고 있음)



천안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www.cnews041.com)



아산시 실개천살리기 사업
(www.cmni.co.kr)

6-3-9. 녹화의 추진

- 충청도와 시군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벽면녹화와 옥상녹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을 적극 유도·지원하여야 한다.

- 상대적으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도시지역(동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 벽면녹화 추진 및 인센티브 개발



전남 여수
(www.yseo.kr)



광주시 벽면녹화와 옥상녹화 사업
(www.dailyjn.com)

참고문헌

임준홍·홍성효, 2015. 7, 도민의 주거환경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177호.

주민설명회.

주거기본법.

악취방지법.

일본 카스가이시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

일본 니카호시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国土交通省, 2014,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http://kodomo-anzen.org/manual/p051/p067>.

<http://www.yeongnam.com>.

<http://www.ugn.kr>.

<http://m.zum.com/news/society/4826972>.

<http://www.ujbnews.net>.

<http://paldal.suwon.ne.kr>.

<http://martsmpa.tistory.com>.

<http://www.danbinews.com>.

<http://www.gangseo.seoul.kr>.

<http://www.cnews041.com>.

<http://www.cmni.co.kr>.

<http://www.ysen.kr>.

<http://www.dailyjn.com>.

<http://www.sgilbo.kr>.

(붙임자료 1) 일본 카스가이시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하여 시,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수반된 환경부하의 저감과 함께 공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및 향후 시민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말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환경부하 : 인간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이며, 환경보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2) 공해 : 환경보전상의 지장 중 사업활동 그 외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수질 이외의 물상태 또는 물밑의 저질(底質)이 악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굴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및 악취와 함께 이러한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그 외 현상으로 양호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 (3) 도시생활형 공해 :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자동차 사용에 의한 소음, 야외연소행위에 의한 매연 또는 악취, 그 외 도시화의 진전 또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공해를 말한다.
- (4) 공공용 수역 : 강, 호수 그 외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수역 및 그에 접속하는 공공구거, 관개용수로, 그 외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수로(하수도법(1958년 법률 제79호)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공공하수도 및 유역하수도이며, 동조 제6호에 규정하는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유역하수도에 접속하는 공공하수도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5) 공장 등 : 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 그 외 사업장(건설공사, 그 외 사업을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현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는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또한 그것을 실시 할 책무를 가진다.

2 시는 환경부하의 저감 및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책무)

제4조 시민은 일상생활, 그 외 활동에 수반하는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스스로 도시생활형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환경부하의 저감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관리체제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도시생활형 공해의 방지

제1절 생활배수 대책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방지)

제6조 시민은 폐수배출에 의한 공공용 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음식쓰레기 등의 적정한 처리, 세제의 적정한 사용, 그 외 생활배수 대책을 자발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생활배수 대책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병처리 정화조로 전환)

제7조 하수도가 정비되어있는 지역 및 하수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정처리구역(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것 한한다) 이외의 구역에서는 단독처리 정화조 또는 재래식 화장실의 변조를 사용하는 자는 합병처리 정화조로의 전환에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소음 또는 진동에 의한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제8조 시민은 음향기, 가정용 공작기기 또는 자동차의 사용, 그 외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으로 주변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업시설 등의 이용자의 의무)

제9조 시민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의 공회전 소리, 사람소리 등에 의한 소음으로 함부로 부근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악취에 의한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제10조 시민은 주택 내 및 그 주위에서 발생하는 악취, 그 외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스스로의 책임과 상호협력을 통해 주변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옥외 연소행위의 금지)

제11조 시민 및 사업자는 연소에 수반한 매연, 악취 또는 다이옥신류(다이옥신류대책 특별조치법 (1999년 법률 제105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다이옥신류를 말한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야외에서 연소시켜 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의해 물건을 연소시키는 경우, 공익상 또는 사회의 관습상 어쩔 수없이 물건을 연소시키는 경우 또는 물건의 연소에 의한 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연소시키려고 하는 자는 연소에 수반한 매연, 악취 등으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3장 지구환경의 보전

제1절 지구온난화 방지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제12조 시는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한 온실가스(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7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온실효과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 억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구 온난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외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상호 협력하여 그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존층의 보호)

제13조 시는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지식보급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오존층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상호 협력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특정제품에 관계되는 프레온가스류의 회수 및 파괴실시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1년 경제산업성·환경성령 제13호)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프레온가스류를 말한다)의 적절한 회수처리 등을 실시하여 대기 중에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산성비의 발생 억제)

제14조 시는 산성비의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산성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적절한 사용, 그 외 자주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의 억제에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약

(자원 및 에너지의 유효이용)

제15조 시는 자원 및 에너지의 유효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에너지 소비의 억제, 그 외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그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에너지 소비의 억제 등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 이용 및 물 순환)

제16조 시는 빗물의 유효이용 및 빗물의 지하침투에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물 이용 및 건전한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그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절수, 빗물의 유효이용 및 빗물의 지하침투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물품 등의 구매 추진)

제17조 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 및 사무 또는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환경물품 등(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0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물품 및 용역의 조달 추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물품 등의 수급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그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물품 구입 및 용역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는 환경물품 등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관리의 추진)

제18조 시는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이하 「환경관리」라 한다)에 관한 활동을 지원한다.

2 시민은 환경관리에 준하는 대치를 일상생활에 도입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그 외 환경부하의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환경관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절 자동차 사용에 수반하는 환경부하의 저감

(자동차 공해의 방지)

제19조 시는 자동차의 사용에 수반하는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환경 개선 등의 시책을 국가, 현 그 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배출가스, 소음 및 연료소비의 저감을 도모하여 지구온난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합리적인 사용에 필요한 정비 및 적절한 운전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회전 스톱)

제20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는 공회전 스톱(자동차의 원동기의 불필요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관리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공회전 스톱에 힘쓰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규칙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간판, 방송, 서면 등으로 공회전 스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 등의 추진)

제22조 시는 공용차와 관련하여 저공해차(현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20103년 아이치현 조례 제7호) 제79조에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저공해차를 구입해야 한다.

2 자동차를 구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공해차 또는 배출가스량이 보다 적은 자동차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제23조 시는 자동차의 운행에 수반한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기관의 정비 및 이용의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과도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피하고, 대중교통기관, 그 외 환경 부하가 적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업소 등의 공해 방지

제1절 공해 등의 방지 대책

(적용 범위)

제24조 사업소 등의 공해방지에 대해서는 법령 및 현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 외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수에 관한 규제 기준)

제25조 사업자는 공장 등(수질오탁 방지법(1970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정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에서 공공용 수역에 배출하는 물(다음 조에서 「배출수」라고 한다), 카드뮴, 그 외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수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26조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배출수를 배출 또는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방법 개선, 그 외 해당 배출수의 배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업자가 전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당해 권고에 관계하는 조치의 실시를 명령하거나, 또는 배출수의 배출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배수에 관한 지도기준)

제27조 사업자는 공장 등에서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물에 의해 생활환경에 관계한 피해를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장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폐수에 대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그 외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계되는 지도를 위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착색수 유출 등의 방지)

제28조 사업자는 착색수(도료 등 현저하게 공공용 수역의 물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함부로 공공용 수역에 배수 또는 지하에 침투시켜서는 안 된다.

(토사 등의 유출 방지)

제29조 사업자는 건설공사 등에서 토지굴착 등의 행위에 의해 공공용 수역에 현저하게 토사 등을 유출시켜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기름 유출 등의 방지)

제30조 사업자는 기름(수질오탁 방지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사용 및 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 기름을 함부로 공공용 수역에 배수 또는 지하에 침투시켜서는 안 된다.

제31조 기름을 공공용 수역에 배수 또는 지하에 침투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유수분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기름을 공공용 수역에 배수 또는 지하에 침투하지 않도록 당해 유수분리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공장 등에서 기름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름을 공공용 수역에 배수 또는 지하에 침투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음 또는 진동의 방지)

제32조 사업자는 공장 등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으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2 시장은 전항의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한 지도를 위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건설현장작업 등(건설공사, 그 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업 중, 심각하게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작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해당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악취 방지)

제34조 사업자는 공장 등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함부로 배출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2 시장은 전항에 규정하는 악취의 배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정한다.

3 시장은 전항의 지침을 정하고,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자재 등의 적정 관리)

제35조 자재, 폐재, 토사 등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점유자 또는 자재 등의 보관장소가 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자재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자재 등 붕괴, 악취, 모래먼지의 비산, 부지 밖으로 토사 등의 유출 등으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2절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

(건물 등의 제거 시 조사)

제36조 유해물질 사용 특정시설(토양오염 대책법(2002년 법률 제53호)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사용 특정시설을 말한다)에 관계되는 공장 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설치자」라고 한다)는 해당 공장 등의 부지인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건축면적 또는 축조면적이 규칙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처분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관계되는 토지의 토양 및 지하수의 특정유해물질(동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오염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에 예정되어있는 이용방법으로 볼 때 토양이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피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시장 확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이용방법을 계속하는 동안은 동항에 정하는 조사방법 중 규칙에서 정하는 조사의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매각 시의 조사)

제37조 설치자는 해당 공장 등의 부지인 토지의 일부를 매각(임차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일부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각에 관계되는 토지의 토양 및 지하수의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염상황 등의 공표)

제38조 시장은 제36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토양 또는 지하수의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상황, 그 외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한다.

(적용 제외)

제39조 전 3조의 규정은 다음에서 말하는 토지의 토양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토양오염 대책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동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을 받은 토지 및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지정에 관계되는 구역 내의 토지

(2) 현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구한 토지

제3절 환경보전에 관한 협의 등

(환경보전에 관한 협의)

제40조 규칙에서 정하는 공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하의 저감 및 공해 방지에 대한 대처를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공장 등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협정)

제41조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와 공해 방지방법, 그 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절 사고 시 대처방법

(사고 시의 조치)

제42조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생 또는 배출시설 혹은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에 관계되는 공장 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고장, 그 외 사고를 원인으로 한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발생, 배출, 비산 또는 침투에 의해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신속하게 해당 사고상황 및 응급조치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고에 관계되는 다음 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한 신고 또는 통보가 이루어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4 사업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개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장은 제1항의 사고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해당 사고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시장은 사업자가 전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동항의 권고에 관계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적용 제외)

제43조 전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말하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는 신고 또는 통보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하수도법 제12조의 9 제1항
- (2) 대기오염 방지법 (1968년 법률 제97호) 제17조 제2항
- (3)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21조의 2 제1항
- (4) 수질오염 방지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 (5) 악취 방지법 (1971년 법률 제91호) 제10조 제2항
- (6)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제23조 제2항
- (7)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조례(2003년 아이치현 조례 제2호) 제24조 제1항
- (8) 현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 제1항

제5장 제발 및 지원

(환경학습 등의 추진)

제44조 시는 시민 및 사업자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학습 및 교육 기회의 제공, 홍보활동의 충실, 그 외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원조)

제45조 시는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알선, 기술자문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6장 잡칙

(기준의 제정 등)

제46조 시장은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환경 보전에 관계되는 규제 또는 지도를 위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스가이시 환경기본조례 (2001년 가스가이시 조례 제33호)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가스가이시 환경심의회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준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감시 등의 체제 정비)

제47조 시장은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이것을 실시한다.

(불만 처리 등)

제48조 시장은 생활환경에 관련한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의해 주변의 생활환경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불만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보고, 검사 등)

제49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오염 등의 방지에 관한 상황, 그 외 필요한 보고를 구하고, 또는 직원에게 공장 그 외 장소에 출입, 필요한 장부서류, 시설 그 외 물건 혹은 공해 등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권고)

제50조 시장은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그 주변의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서 해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하는 경우 외에 사업활동, 그 외 사람의 활동에 수반한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발생, 배출, 비산 또는 침투에 의해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가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태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사태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표)

제52조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해당 권고를 받은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표될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임)

제53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는 5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의 시행 시 현재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에 착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10년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대기오염 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년 법률 제3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년 정령 제21호에 의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 일본 카스가이시 홈페이지 조례 참조 번역

(붙임자료 2) 일본 니카호시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시, 시민 등 및 사업자의 개별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미래에 보다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있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시민 등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 시에 체재하면서 사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및 여행자를 말한다.
- (2) 생활환경 사람의 생활에 관계하는 환경을 말하며,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더불어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4) 좋은 환경 시민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및 자연 환경을 말한다.
- (5) 공공장소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어항, 해안 그 외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6) 빈집 등 시에 소재하는 건물이나 그 외 공작물로 상시 무인 상태에 있는 것과 현재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말한다.
- (7) 쓰레기 식음료를 수납하고 있던 캔, 병 그 외 용기(이하 "빈 캔 등"이라 한다) 및 담배꽂초, 종이 부스러기 그 외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8) 사업자 도시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소유자등 도시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는 각종 시책을 통하여 종합적인 환경미화 촉진 및 양호한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시민 등의 책무)

제4조 시민 등은 양호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가정 외에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집으로 가지고 가기, 집 주변의 청소활동 등, 환경미화의 촉진에 관한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가 실시하는 환경미화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유지되도록 스스로의 책임 및 부담으

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가 실시하는 환경미화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의 책무)

제6조 소유자 등은 그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서 빈 캔 등의 쓰레기 버리기 방지에 노력하고, 환경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시에서 실시하는 환경미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공가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등)

제7조 어느 누구도 타인의 토지 등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2 공가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등)

제8조 어느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함부로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쓰레기 회수 명령)

제9조 시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를 가지며 돌아가거나, 회수용기 등에 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가 등의 관리)

제10조 공가 등의 소유자 등은 자연현상 등으로 건축물이 흐트러지거나 부지에 초목 등이 무성하고, 그 공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이하 "관리 부진상태"라 한다)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관리에 노력하여 양호한 환경을 지켜야 한다.

- (1)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자연현상 등에 의해 흐트러지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
- (2) 해충 또는 악취 발생장소가 되는 것.
- (3) 들개나 길고양이의 거처가 되는 것.
- (4) 불특정자의 침입에 의해 화재 또는 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
- (5) 교통상의 장애가 되는 것.
- (6) 폐기물의 불법투기장소가 되는 것.
- (7) 건축자재 등의 지저분하게 쌓아두거나 경관을 해치는 것.
- (8) 전 각 호에서 언급한 것 외, 환경위생 및 양호한 환경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

(공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언, 지도 및 권고)

제11조 시장은 빈집 등이 관리 부진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빈집 등의 소유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조언 또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가 등 또는 부지에 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공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조성 등)

제12조 시장은 제5조의 지도 등 또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등을 할 수 있다.

(작업자 알선 및 긴급 안전대책)

제13조 공가 등의 소유자 등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건축물의 흐트러짐, 들개 등의 침입, 초목 등의 제거 그 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부진상태의 개선조치를 스스로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시장에게 작업자의 알선을 의뢰 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물 등이 관리 부진으로 위험한 상태로 처해 있는 경우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스스로 위험한 상태의 해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긴급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공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명령)

제14조 시장은 공가 등이 관리 부진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가의 소유자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건축물의 흐트러짐, 들개 등의 침입방지, 초목 등의 제거 그 외 관리 부진상태의 개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업자의 버리기 방지의 책무)

제15조 사업자는 빈칸 등의 버리기 방지 및 재자원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도 버리기 방지를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여관업 및 호텔업 사업자는 빈칸 등의 버리기 방지 및 재자원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이용자의 계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수용기의 설치의무 등)

제16조 캔 등의 판매업 및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업자는 회수용기를 설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양호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명령)

제17조 시장은 사업자가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회수용기를 설치하고, 또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

다.

2 시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가축 관리)

제18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관리자의 책임 아래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거나 관리함과 동시에 분뇨 등의 적정한 처리와 더불어 악취 및 위생 해충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한다.

(애완동물 등의 관리)

제19조 개, 고양이 그 외 애완동물 사육자는 해당 애완동물이 주민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2 애완동물의 사육사는 그 사육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애완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사육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르는 개 소유자 및 사육자는 기르는 개를 야외에서 운동시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르는 개를 가죽 끈, 체인 등으로 연결하여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르는 개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구를 휴대하여 처리한다.

(3) 기르는 개의 배설물에 의해 공공장소, 타인의 토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오염시켰을 때는 즉각적으로 처리한다.

4 기르는 고양이의 소유자 및 사육자는 기르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운동시키는 경우 전 항 제3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육자에 대한 권고 및 명령)

제20조 시장은 가축 및 애완동물의 사육자가 앞의 2조에 규정하는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킨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축 및 애완동물 사육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녹화의 추진)

제21조 시장은 녹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변, 공원, 광장, 그 외 공공시설에 수목, 화초 등의 식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 등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수목, 화초 등을 식재하고, 스스로 녹화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제22조 시민 등은 자연에서 생식 또는 생육하는 동식물을 그 생식 또는 생육하는 자연

환경과 함께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식을 깊이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파괴하고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의 방지대책 추진)

제23조 시민 및 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역 전체의 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그 외 물질(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프레온가스와 더불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대기 중에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제24조 시민 및 사업자는 대기의 보전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에너지 사용의 절감,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 그 외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등의 소유자 등의 노력 의무)

제25조 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을 정비하고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2 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동절기에는 필요이상의 온기운전 및 운전자가 떨어져 있는 동안이나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등에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한다.

(2) 운전자가 휴식 또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공회전을 장소나 기후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제한다.

(출입조사 등)

제26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원을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입하거나, 설명 혹은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 등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제27조 시장은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유 및 명령에 따르지 않는 취지를 기록하고 주소 및 성명을 공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공표는 니카호시 공고식 조례(2005년에 니카호시 조례 제4호)에 근거한 게시판 또는 니카호시 공보에 의해 실시한다.

(위임)

제2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벌칙)

제29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 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0조 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3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시행일자)

1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조례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의 전날까지 합병 전의 仁賀保정 환경보전조례(1997년 仁賀保정 조례 제1호) 또는 象潟정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1999년 象潟정 조례 제12호)(이하 「합병전의 조례」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수속, 그 외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상당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의 전날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만약 합병전의 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2년 9월 25일 조례 제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 : 일본 니카호시 홈페이지 조례 참조 번역